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605호 | 202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값 1,000원

후원 계좌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재명의 이주노동자 차별적 망언 2면

이주민 혐오를 정상 담론으로 만드는 이재명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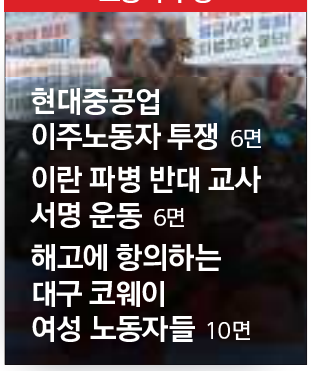
세계 항만 노동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 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정부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5면

메가프로젝트 8, 9면

초광역특구법, 파견근로제, 직무급제 12, 11면

노동자 투쟁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6면

이란 파병 반대 교사 서명 운동 6면

해고에 항의하는 대구 코웨이 여성 노동자들 10면

이주민을 비난하며 보수파에 추파 던지는 이재명

관련 기사 2, 3면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계약해지 철회하라

관련 기사 6면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애먼 이주민 희생양 삼는 이재명

임준형

이주민 비난 망언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는데도 이재명은 자신이 옳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다. 지지층 반발에 연연하지 않고 '중도우파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10월 27일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 보조 방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우파적 반발을 의식해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물론이고 농업 자본가들도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코웃음을 쳤다.

이에 대한 비판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특히 이주민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은 그다음 날 보란 듯이 엑스(옛 트위터)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이재명이 동조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극우들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며 애용하는 논리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자 이번엔 '정치적 올바름'을 비난하고 나섰다(3면을 보시오).

국힘 나경원은 즉각 이 말을 환영했다.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대중투쟁 덕분에 부상한 이재명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가기구의 안정성을 우선하며 쿠데타 세력 숙정을 단호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할 개혁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재명의 '중도우파 외연 확장', '중도 실용주의'는 이런 배신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리고 배신은 메가특구특별법, 이란 전쟁 파병 추진 등 더욱 오른쪽으로 기울어 왔다.

이번 이주민 비난 망언들은 중도우파 외연 확장이 차별 문제에서도 우파의 논리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의 발언들은 극우의 배외주의 선동을 정당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키우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아주 고약하다.

이재명이 우파의 의제를 수용할수록 국힘 등 우파는 사기와 자신감이 오르고 개혁 염원층은 실망과 환멸로 돌아설 것이다.



사진 출처 경기도

저임금과 체불, 브로커 비용으로 고통받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

다문화가족 지원이 내국인 '역차별'?

이재명은 다문화가족 지원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부여와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입소 우선 순위 기준에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 성격이다. 결혼이주민(다수는 여성이다)의 부모 등 친인척이 대부분 본국에 있어서 돌봄에 대한 도움을 청할 사람이 내국인가족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한 배려 정책이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가점을 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게다가 정부는 상당수 이주민들에게 본국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에도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해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 이민자 유입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체류자격을 결혼 관계 유지나 한국 국적의 자녀 양육 여부와 연동시켜, 결혼 이주 여성이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이라는 구실에 충실하도록 강요했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은 결혼 이주 여성이 차별을 겪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출산에 대한 조그만 지원을 두고 '과잉 특혜'라며 축소하려는 것은 가당찮다. 이재명이 문제 삼은 서울 산후조리원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은 10명에 불과했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반드시 저소득층은 아닐 수 있다며 지원 축소를 정당화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내국인 가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컨대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순위에 포함된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도 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불합리하다. 즉, 사회적 배려 정책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소득만이 유일한 기준인 듯 왜곡해 기계적 '공정성'을 따져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기존 혜택을 늘릴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복지 삭감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군비는 늘리고 메가특구 등 기업 지원에는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복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 문제로 왜 보통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겠는가. 계급 간 불평등을 따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본국 송금, 한국 경제에 도움 안 돼?

임금은 (이주)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한국인) 사용자가 가져가고, 그것이 이윤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사용될 재화와 서비스도 생산하고 자본 축적에도 기여한다. 이주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임금을 어디에 쓰든 그것은 노동자의 자유다. 이주노동자들의 본국(가족) 송금을 죄악시한다면, 사실상 이주노동자 천대와 배척을 '국부 유출 저지' 같은 명분 있는 일로 만들어 줘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사실 다수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을 데려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막아 온 정부가 가족 송금을 타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진정한 문제는 이주노동자냐 내국인 노동자냐가 아니라, 계급 불평등이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 몫'에 해당하는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1퍼센트로 2010년 이후 최저였다.(〈한겨레〉 11월 1일 자) 이재명 정부하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홈플러스 사태 늑장 개입 등을 보면 아직 임기 1년 반도 안 됐다는 핑계는 안 대느니만 못할 것이다.

그래 놓고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문제 삼는 것은 고물가, 생활고,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펨코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더 문제?

이주민 혐오를 정상 담론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이 문제다

이재명의 이주민 차별적 망언이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도리어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이주민 배척을 고무할 대통령의 망언을 비판한 것은 언행불일치이기는커녕 응당 제 할 일을 한 것이다.

이재명의 잇따른 이주민 차별적 망언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

이재명을 흠집 낼 만한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하루 24시간 잠도 안 자는 듯 보이던 우파의 여당 저격수 정치인들은 이 문제만큼은 내심 웃으며 침묵을 지켰다. 오세훈과 나경원은 이재명의 말을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이 공유한 에펨코리아(펨코) 게시판에서도 호응이 있었다. 펨코 게시판은 극우 성향 게시판으로, 특히 차별 문제에서 극우적 시각이 판친다. 이재명이 공유한 게시물도 사실관계는 뒤죽박죽 엉망인 채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내국인 역차별"론은 지금 세계적으로 극우의 대표적 화법이다. 서구 극우는 이주민과 난민에 책임을 전가하며 신자유주의적 긴축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복지 삭감으로 고통받는 대중 일부를 포섭해 왔다. 한국에서는 아직 정상 담론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국인 역차별"은 한국에서 극우에게 '도그 휘슬'처럼 이용돼 왔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재명이 그것을 정부 방침으로 공개 거론한 것이다. 우파의 계산된 용어법을 정상 담론화해 준 셈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 약자 혐오 선동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적반하장과 책임전가로 얼룩진 궤변에 불과하다.



혐오 사이트를 폐쇄한다고까지 오버 하더니 펨코의 혐오 게시물을 추천한 이재명

따라서 이재명의 이런 궤변과 망언 행보를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반극우 좌파의 '언행일치' 사례다.

우파에 추파 던지나?

이재명은 자신의 의도를 보라고 하지만, 그게 뭐든 이재명의 '정치적 올바름' 공격은 우파와 극우에 힘을 실어 주는 효과를 낸다.(앞서 보듯이 그에 대한 진지한 비판을 무시하므로 발화 의도에 대한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서구 극우는 차별 반대 운동을 공격하려고 '정치적 올바름'을 문제 삼아 왔다. 미국 극우와 교류하는 한국 극우도 십 년 전부터 '정치적 올바름'(PC)을 문제 삼아 왔다. 그 대표적 논리가 바로 PC가 남성과 내국인을 향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행불일치 비난은 이재명 본인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내란 청산'과 '사회개혁' 약속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

이재명은 올해 5월 혐오 사이트 폐쇄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때 일베류 커뮤니티 사이트 중 유일하게 사이트 운영진이 성명까지 내며 반발한 곳이 바로 펨코 사이트였다. 그들은 '커뮤니티 공격에 대한 입장'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이 "조롱과 혐오"가 담긴 펨코 게시물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차별받는 사회집단(여성, 소수 인종,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는 태도 또는 그런 방침을 뜻하고, 그런 태도나 방침은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정치적 올바름'의 정치적 약점(가령 사람들에 대한 도덕주의적 훈계와 지나친 언어 단속, 다른 좌파를 캔슬하기, 연대에 대한 열의 부족 등)이 역효과를 일으켜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차별 반대 운동의 전진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의 문제점을 토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망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올바름'의 일부 역효과 발현이 전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편에서 최고 권력자의 차별 망언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부정확하고 우파적인 발화가 사회에 미칠 객관적 효과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의 일부 역효과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회 정의를 위한 필수적인 비판이다.

김문성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오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유럽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다

커밀라 로일

유럽에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11월 5일 목요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우측 하단 참조).

이에 앞서 10월 30일에는 지중해 전역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와 유럽 국가들의 대대적인 재무장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그날의 행동을 발의한 것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바스크 지역의 항만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미국, 호주, 인도 등지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호응했다.

10월 마지막 주 스페인에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사망자를 낸 열차 충돌 사고를 계기로 철도 노동자들이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탈리아에서 항만 노동자들의 행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노조들인 기층노동조합(USB), 노동자 권리를 위한 기층 위원회(ADL Cobas), 자율 항만노동자회(CLAP), 노동자자기조직 기층위원회(SIAL Cobas), 부문간 기층 위원회(SI Cobas)가 벌인 총파업의 일부였다.

로베르토 씨는 리보르노의 철도 노동자이자 기층노동조합(USB)의 조합원이다. 리보르노에서는 약 1만 5,000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로베르토 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100만 명 넘게 참가했을 것입니다.

"운수 노동자들은 교통부 장관 마테오 살비니의 파업 금지 명령을 거스르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살비니는 유럽에서 파업권을 가장 억누르는 법률의 하나인 146/90호 법률[공공부문 파업 규제법—역자]을 휘둘렀습니다."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극우 정부에 대한 분노가 광범하다. 프랑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교육·학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가 분출했다.

그러나 이 분출은 지난해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에서 자양분을 얻었다.

로베르토는 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조직된 지난해 '모든 것을 봉쇄하라' 운동의 기세가 다시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제국 중심부의 노동계급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생계비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는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이 연료비 급등과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토리노 도심 시위에 참가한 레다 씨는 수만 명이 "이 정부에 맞서 들고일어선" 이날의 행동이 "가슴 뭉클했다"고 전했다.

시위 전 농민들이 토리노 시청 앞에 분뇨가 담긴 드럼통들을 내려놓았다고 레다 씨는 전했다.

"생계비 고공 행진을 멈춰라, 전쟁 반대, 재무장 반대. 부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고, 너희는 미래를 훔치는 도둑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행진 대열 맨 앞에 펼쳐졌다.

레다 씨는 "보통의 노동계급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의 폭력과 갈수록 확대되는 국가 탄압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다. 또 이탈리아 국가가 자행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가 시위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초 학급 내 '이주민' 비율을 30퍼센트로 제한하고 학교에서 부르카와 니캅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레다 씨는 이렇게 전했다. "가장 큰 토론 주제 하나는 인종차별 반대였습니다. 우익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시위하는 청년들을 '마란차'라고 부릅니다. 이주민 2세를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 말에는 이주민들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그들이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희는 그들을 마란차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낯서지 알고,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그들이 곧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10월 30일 총파업에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화물차들이 8일간 파업에 나서 연료 수송과 식료품 수송에 차질을 줬다.

레다 씨는 멜로니 투표자들의 일부도 이제 멜로니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9월에 유가가 오르자 이탈리아 남부의 화물차 운전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유가가 너무 높아서 생산물을 운송해 봐야 수지가 맞지 않았기에, 이들은 항의하며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남부의 투쟁과 북부의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연대



사진 출처 WFTU

거리 투쟁과 파업이 서로를 북돋고 있다. 그리스(위)·이탈리아(아래)의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

프랑스: 학교 봉쇄 재개하며 파업에 박차를 가하다

프랑스에서는 2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11월 2일 월요일부터 학교 봉쇄가 재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날 오전 41개 학교에서 봉쇄와 시위가 벌어졌고, 화요일까지 더 많은 학교가 운동에 동참했다.

정부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교사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는 한편, 많은 반감을 산 대학 입학 지원 체계인 파르쿠르쉬프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0월 31일 프랑스 전역에서 약 50만 명이 시위를 벌여 3주 연속으로 주말 행진을 이어 갔다.

파리 당국은 승인된 경로를 따라 도심을 우회하라고 시위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는 이를 거슬렀다.

공식 행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바스티유 광장으로 향했지만 국가헌병대에 가로막혔다.

시위대는 거리 통제를 위해 투입된 경찰 7만 명과 맞서 싸웠고, 한 시위 참가자는 화염병을 사용하기도 했다.

540억 유로 규모의 삭감이 담긴 내년 예산안에 맞서 6개 노총이 11월 5일 목요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중고등학생들이 포문을 연 프랑스 투쟁은 생계비, 전쟁, 파시즘의 위협에 대한 더 광범한 분노에 불을 붙였다.

운동의 진로를 두고 중요한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봉쇄는 방학이 끝난 뒤 다시 기세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11월 5일 파업은 하루짜리 행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이른바 '갱신형 파업', 즉 파업 연장을 거듭 결정하며 투쟁을 이어 가는 것으로 나아갈 것인가?

출처 Camilla Royle, 'Workers take to the streets of Europe' (2026. 11. 2) / 번역 이원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팔레스타인 운동 탄압은 영국 노동당 정부를 몰락으로 이끌 약점

영국 노동당 총리 앤디 버넘이 "4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를 끝내겠다"고 아무리 공언해도,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사실은 취임 직후부터 분명했다. 버넘은 [전임 총리] 키어 스타머 못지않게 대서양 안보 체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서방 제국주의에 굳게 매여 있다.

현 정부도 전임 정부처럼 그 문제 때문에 몰락할 공산이 크다.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현 정부의 헌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는 군비 지출을 늘리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규탄해 마땅한 일이지만 말이다. 더 중요한 사례는 현 정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자지구 인종학살에 공모하며 정당성 위기에 직면했다. 그들은 살인적인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 이스라엘을 응징하거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계속 학살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국주의 체제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서방 정부들의 일반적인 대응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자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방 지배계급 안에서 시온주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영향력이 실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서방 지배계급은 자신의 통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사진 제공 Guy Smallman

비폭력 직접 행동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할 만큼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 방어에 헌신적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소중한 자산

버넘은 노동당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규탄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고, 외무장관 에드 밀리밴드가 서안지구의 불법 시온주의 정착촌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경제·군사적 동반자다. 동시에 영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악랄하면서도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 사례는 스웨덴 마르크스주의자 안드레아스 말름이 영국 입국을 금지당한 것이다. 말름은 2016년 아이작 앤 타마라 도이처 기념상을 수상한 명저 《화석 자본》[국역: 《화석 자본 —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의 저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말름의 다른 저서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 방법》을 재빨리 문제 삼았다. 그러나 말름이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십중팔구 그의 기후 운동 활동 때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공공연히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10월 30일 금요일 BBC 라디오는 말름과 기괴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자는 로봇 같은 어조로 '팔레스타인 액션'[스타머 노동당 정부하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과 어떤 관계냐고 캐물었다. 이는 과거 매카시즘의 사도들이 던지던 질문("당신은 현재 공산당원이거나 과거에 공산당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을 연상시켰다.

한편, 런던경찰청은 '팔레스타인 액션' 테러 단체 지정을 규탄하는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그 단체 지지만 표명해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진즉에 정당성을 잃은 탄압을 더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이다' 결의문을 당대회에서 채택한 녹색당을 유대인 혐오라고 버넘이 공격하는 것도 동일한 탄압 물결의 일부다. 버넘이 노동당 지역 조직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녹색당과 연정을 깨라고 지시한 것은 녹색당이 왼쪽에서 제기하는 도전을 떨치려는 빤한 술책이다.

이 모든 교활한 수작은 권위주의 강화와 민주적 권리 공격이라는 추세에 힘을 싣는다. 그 추세는 2000년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의 '테러방지법'에서 시작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됐다.

그러나 이런 공격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이다' 결의문에 대한 온갖 비난은 최근 이스라엘 총선 결과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다. 의회(크네세트)에서 아랍계 의원들이 의석을 늘렸는데도, 유대계 정당들은 아랍계 의원들은 입각해선 안된다는 데에 거의 만장일치다.

이는 유대인 우월주의 국가 이스라엘의 본질을 생생히 보여 주는 사례다. 이스라엘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체제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가혹한 인종분리 체제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자국 지배자들이 계속 결탁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는 거짓 비방에 겁먹지 않는다. 이는 재무장과 인종학살에 반대해 10월 30일 벌어진 초국적 파업 물결에서도 드러난다.

버넘이 녹색당 지지를 어느 정도 갉아먹는 데 성공한 것은 그가 신자유주의 시대와 진정으로 단절하는 진보적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그가 예산안을 발표하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자유주의는 꽤 건재해 보인다"고 이죽거렸다.

버넘이 계속 그 길을 가면서 팔레스타인 운동을 계속 중상모략 한다면 그도 무너질 것이다, 스타머가 그랬듯이.

번역 김준효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프랑스 시위 참가자 인터뷰
★ 반란의 유럽 멈춰 선 성장, 치솟는 물가, 늘어나는 군비
★ 프랑스 국민연합은 파시스트 정당인가?
★ 이스라엘 총선, 그 이후는?
★ 프랑스 저항을 계기로 보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

교사 1,200여 명과 교원 단체 33곳, 이란 파병 반대 서명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 참전을 도모하는 데에 항의해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추진 중임이 알려지고 9월 15일부터 교사들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반대 교사 선언'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사 1,206명과 교원 단체 33곳이 선언에 동참했다(10월 30일까지). 선언에 동참한 단체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조와 17개 시도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참교육동지회,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팔연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등이 있다.

선언에 참가한 교사·단체들은 10월 31일(토) 오전 11시에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팔연교 공동운영진 조수진 교사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이미 연락 장교를 파견했고 최소 11월 중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교사로서 침략 전쟁 참전에 중대한 분노와 우려를 담아" 이번 선언 발표의 의의를 밝혔다.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대표인 류현민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에 있거나 입대할 예정"이라며 그들이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투입돼] "...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를,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김소망 교사는 '국익' 운운하는 파병 정당화를 비판했다.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기들과 그 어떤 원한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때로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사 교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데에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 우리가 힘써 맞서온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동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재한 이란인의 메시지도 소개됐다(크리스 사비유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대독). 메시지는 폭격으로 죽음과 파괴에 직면한 이란의 학교와 아이들의 모습을 전하며, 한국군 파병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들은 전쟁이 아니라 교육에 돈을 쓰라고 요구하는 프랑스 교사·학생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다.

김준효



사진 권순모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 집단 재계약 거부 철회하라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0월 27일 대통령 이재명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망언하고 3일 뒤, 현대중공업에서 직고용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재계약 거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1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이주노동자 중 많은 이들이 사실상 해고되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도 대규모로 이주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544호, '조선소 이주노동자 대규모 재계약 탈락: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당장 재고용하라!')

올해 1월 이재명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확대 반대 발언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동조한 이후,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직고용 이주노동자를 축소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집단 재계약 거부는 사용자 측의 직고용 이주노동자 축소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 때문에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은 올해 6월 나쁜 계약에 맞서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재계약 보장도 요구로 내걸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재계약 거부는 어찌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피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빚을 내 수천만 원을 송출업체에 지불했다. 아껴 쓰며 겨우 빚을 갚아 갈 때쯤 사용자 측은 근로계약서를 개악하더니 이제는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집단적으로 재계약이 거부된 노동자 중 올해 앞장서 투쟁해 온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16명은 노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다.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은 올해 6월 사용자 측의 나쁜 계약과 부당한 밥값 공제 등에 맞서 싸워 일부 조항을 개선했고 부당하게 공제당한 밥값을 돌려받았다.

이 투쟁의 여파 속에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이직 시 사유를 불문하고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의 조항을 삭제하게 만들었다.

최근 하청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들은 사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점에 항의해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했다.

명백히 투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의 선두에서 투쟁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16명(더 늘어날 수 있음)이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다는 점은 투쟁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간 관리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해 왔다. 그런 협박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는 그들의 투쟁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투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11월 3일 저녁에 자신들이 나쁜 계약에 맞서 최초로 집단행동을 한 장소에 다시 모인다. 그들은 "우리 중 한 명을 공격하는 건, 우리 전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고된 사람들을 지켜 내야 노동조합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노조 탄압 계약 만료 상황에 맞서 전 조합원이 모여 단결된 투쟁을 결의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전체 조합원 모임을 진행한다.

재계약 거부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응원한다.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정주 노동자 등 공장 안팎의 연대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고통받았다. 뒤이어 정규직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으로 고통받았다. 이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한 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 하락하면 다른 부문 노동

▶ 7면으로 이어짐

10월 28일 홍대입구역

여성들의 표현 자유에 가해진 젠더 폭력

10월 28일 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도에서 정기(매주) 공개 판매 활동을 하던 〈노동자 연대〉 신문 여성 지지자들이 중년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가해 남성은 갑자기 홍보 활동 공간에 난입해 "팔레스타인 거짓 선동 하지 마라"며 여성들을 겨냥해 장대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 추가 폭행을 막으려던 여성들과 주변 청년들도 피해를 입었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은 매주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연대〉 주간 신문을 홍보·판매한다. 동시에 주요 최신 이슈에 대한 입장, 주말 집회, 공개토론회 등을 알린다. 이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다. 이 점을 알렸는데도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젠더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날은 10월 31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앞두고 그 집회도 부각해 알리는 중이었다. 가해자는 2주 전에도 나타나 프랑스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거짓말한다"며 여성 지지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그날은 중년 남성 지지자의 눈치를 보고 돌아갔다.

2주 만에 다시 팔레스타인 문제를 부각시킨 이날 가해자는 여성을 딱 찍어 신문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나 같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해도 되냐"고 거짓말했다.

폭행 피해자 A 씨와 동료들은 당시 주변 청년들의 연대에 감사하다며 위축되지 않고 팔레스타인 연대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보시오.



가해자는 수많은 인파가 보고 있는데도 장대를 이용해 여성을 폭행했다

폭행 피해 여성이 보내온 편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번 일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혐오했고, 이를 이유로 반복해서 저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 자의 폭력이 여성을 집요하게 겨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 참가자들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젊은 여성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제일 체구가 작은 저를 조준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성에게 막대를 휘두르냐고 항의해도 거듭 저를 가격했고 다른 여성 참가자들이 장대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팔을 비틀어 위험에 빠뜨렸어요. 또 말로 항의하던 한 여성 코앞에 가서 윽박지르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만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명백한 젠더 폭력입니다.

무기를 사용한 폭력과 위협 때문에 저를 비롯한 피해 여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격당한 곳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곳곳이 멍들었습니다. 그 멍을 보면서 다시 폭력 상황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깨 근육 손상이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른 여성들도 사건 직후에 심장이 계속 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 상담 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난동범이 집회를 방해한 사건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젠더 폭력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피해 여성들을 보복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SNS에서는 일부 극우들이 관련 영상을 퍼뜨리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자들이 청소 업무를 방해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몰아가고, 여성들의 신상을 캐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여성 참가자들은 1차 수사기관인 마포경찰서에 2차 피해 방지를 분명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이번 폭력 사건은 분명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저를 비롯해 여성 참가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키고 젠더 폭력에 맞서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바랍니다.

▶ 6면에서 이어짐

자들의 조건에 대한 하향 압력이 생긴다.

반대로 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공격에 맞서 투쟁할 때 모두가 단결해 함께 싸워 방어해 낸다면 모두를 향한 공격을 막아내고, 나아가 모두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항의 투쟁을 잘 조직하고 계약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얼마 전 지부장의 크레인 고공농성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두 차례 지지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투쟁 지지금까지 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연대한 배경에는 현대중공업지부가 농성 이유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를 내건 것도 작용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중공업지부의 합의안에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 특별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것 외에 임금과 고용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재계약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재계약 거부된 노동자들이 직고용 이주노동자이고, 그 중에는 하청지회에 소속 조합원도 포함된 만큼 현대중공업지부가 이들의 재계약 보장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청지회도 재계약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적극 건설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에 연대했던 만큼 그들의 연대에 우리가 보답할 차례다. 이주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장호종

이재명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로 2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8월에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에도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격전'의 비용은 누가 치르게 될 것인지부터 알아보자.

개발의 비용은 누가 치르나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어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지을 수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은 아파트에서 불과 90미터 떨어져 있고 아침 7시부터 소음과 먼지를 줄곧 뿜어낸다고 한다. 영등포구 양평동에는 빌라와 불과 1미터 떨어진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도 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 등을 위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데, 현재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효율은 국제 평균보다도 떨어진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도 훨씬 큰 악영향을 환경에 끼칠 것이다.

반도체 생산 시설도 마찬가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두 곳이 계획대로 가동되면 2035년 용인시 전력 소비는 지금의 5~6배가 된다. 2022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시 소비량의 0.8퍼센트였다. 나머지 전력을 공급하려면 더 많은 화력 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속도전'을 내건 정부는 이를 위한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은 그 뒤에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다.

노동자 삶 위에 올라선 메가프로젝트

노동조건도 같은 방향이다. 민주당 박상혁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제외, 기간제 최대 4년,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무급휴일·파견 확대가 담겼다.

이재명은 추가 노동에 보상하지 않는 특례는 "절대 안 된다"면서도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을 시행령으로 넓힐 여지도 시사했다. 이후 청와대는 아직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덮었지만, 변화 방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AI의 영향은 해고보다 신규 채용 축소로 먼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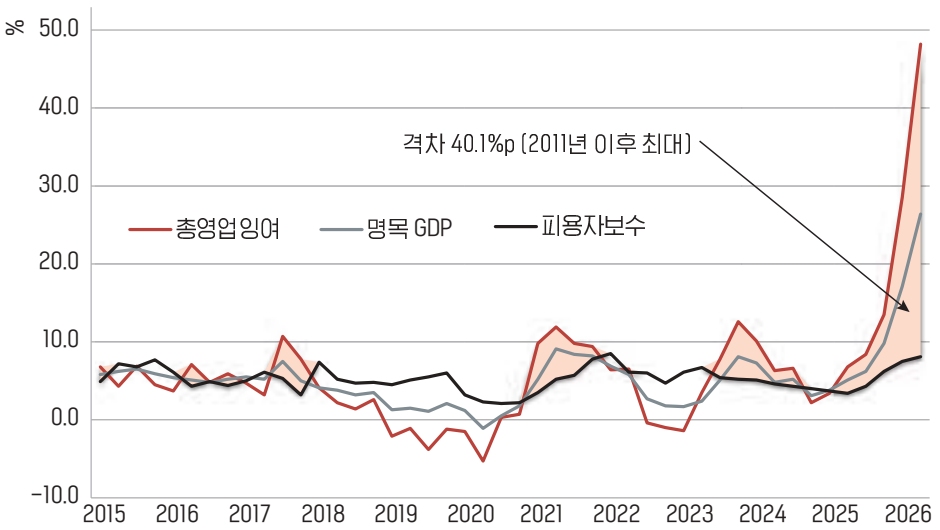
10월 26일 한국은행은 청년(15~29세) 고용률이 2022년 46.6퍼센트에서 올해 1~9월 43.7퍼센트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생산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이끄는데 상용직 채용은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성장이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11월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청년 고용이 약 17퍼센트 줄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신입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이 일 경험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주들이 AI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AI가 노동자들 일을 대신해서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가속시키려 한다. 11월 2일 이재명은 제조업 현장의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숙련 노동자의 지식을 AI에 옮기겠다는 것인데, 신규 채용을 어떻게 늘릴지는 말하지 않았다.

사상 최대 GDP와 이윤, 노동자 몫은 사상 최저



자료 출처 한국은행

성장의 과실은 누구의 주머니에?

이재명은 9월 1일 엑스에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12.8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은 29.7퍼센트인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증가율은 9.3퍼센트로 기업 지원 분야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 세수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그중 104조 4,000억 원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2조 1,000억 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간을 달라'고 한 사이, AI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지난 반년 사이 주식시장의 급등락이 그 불안을 잘 보여 준다.

거품이 정확히 언제 붕괴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정부가 위기에 빠진 AI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기는커녕 긴축을 강요당할 것이다.

국가 간 경쟁 수단이 된 AI와 군비 증강

2027년 국방비는 73조 3,000억 원으로 8.2퍼센트 늘었고, 방위력 개선비는 13.8퍼센트 늘었다.

이재명은 시정연설에서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11월 1일 국방드론 본부 창설에 부쳐 국방부는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국주의 시스템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은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경쟁의 융합으로 나타난다. 가장 앞선 AI 기술은 대규모 살상 무기에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이란 폭격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그 경쟁에 한 발 들여놓으려 하고, 그 경쟁을 AI 개발과 투자의 명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착취를 돕는 AI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돕는 AI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연장이나 기간제, 파견제 도입 등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뿐 아니라 광범한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파괴와 규제 완화에 반대해야 한다.



사진 출처 민주노총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삶을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도박

AI, 누가 무엇을 위해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며 축적하는 체제이고, 기술 혁신은 그 경쟁의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살아 있는 노동이지 기술이 아니다. AI도 마찬가지다.

자본가들의 기술 혁신 경쟁은 노동자 일부를 대체하면서도 더 강력한 기술에 노동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멈춰 자본가에 맞설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

즉, AI는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착취에 맞서는 저항의 수단도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AI를 소유하고 통제하느냐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에서 AI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누가) 세계 자본주의 경쟁에서 한국의 지위를 끌어올리려고(목적), 단기간에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 경쟁에는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군사적 경쟁도 포함된다.

이런 목적 아래 사업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실제 필요를 뒷전으로 미루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와 규제까지 배제하거나 완화된다. AI·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세수가 걷혀도 정부는 이를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경쟁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 결과 기업주들의 부와 권력은 더 집중된다.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AI를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려면,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생산 전체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노동자 권력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AI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목적과 특히 그 방식에는 지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한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악영향을 막아 내고 일정한 성과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투쟁들에서만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의 근력도 기를 수 있다.

노동자들은 AI가 더 많은 노동 강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쓰이도록, 더 많은 휴식과 충분한 숙련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도록, 보통 사람들의 생존과 삶의 전제 조건인 환경에 끼치는 파괴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싸워야 한다.


사진 출처 육군

반도체 초호황에도 임금 몫은 최저

이재명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통계를 보면 경제와 살림이 갈라져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한국은행이 9월 8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26.4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인 피용자보수는 8.1퍼센트 늘어난 데 그쳤고, 기업 이윤에 해당하는 총영업잉여는 48.2퍼센트 늘었다.

〈한겨레〉는 한국은행 통계를 직접 계산해, 2분기 GDP에서 노동자 몫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퍼센트로 1년 전(47.9퍼센트)보다 6.8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분기별로 비교할 수 있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기업 이윤 몫의 비중은 43.9퍼센트에서 51.9퍼센트로 올라 같은 기간 가장 높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0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같은 수치를 밝혔다(노동자 몫 비중이 47.9퍼센트에서 41.1퍼센트로 하락).

명목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상반기 피용자보수는 1년 전보다 7.9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이윤이 그보다 훨씬 빨리 늘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영업이익 107조 4,000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게다가 실질임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연속 4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8월에서야 가까스로 0.8퍼센트 올랐다.

노동자 임금 격차도 커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통해 이 격차를 줄이려 한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 자기 몫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자에게는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다.

비슷한 요구가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하자 정부는 아예 성과급 요구를 합법적 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더니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한술 더 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저임금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더니 정작 노동자들이 이를 근거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려 하자 시행 지침으로 요구를 봉쇄해 버렸다.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영상을 보며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인권침해"라던 대통령이 농어촌 이주노동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이주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닷새 넘게 SNS로 비난을 이어갔다.

이런 정부와 '사회적 대화'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공상적이고 무기력하다.

반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운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투쟁이 더 많아지고 좌파가 그 속에서 연대를 구축해야 이재명 정부의 우경화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장호종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초청 강연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에게서 듣는다

핵발전과 SMR, 그리고 핵융합: 핵에너지 제대로 알기 ② 핵발전과 에너지의 미래

일시 11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억울한 해고에 항의하는 대구 코웨이 여성 노동자들

10월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가 코웨이 대구 서부 갤러리 앞에서 '원아웃 업무 해약(해고)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석 달째 부당해고에 맞서 용기 있게 싸우고 있는 이미경, 석효선 두 여성 노동자를 응원하고, 코디(코웨이 현장 방문 점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원아웃 업무 해약(해고)'하는 코웨이 사용자 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집회에는 대구·경북 지역뿐 아니라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경기본부와 대전세종충청본부 조합원들이 참가했고,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퇴직 전교조 교사 등도 연대해 50여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초 기자회견 때보다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다.



사진 안우춘

동료들의 저항을 보며 코디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는 일이 늘고 있다

노경찬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두 여성 노동자를 응원하며 원아웃 업무 해약 제도를 규탄했다.

"8월부터 시작한 이미경, 석효선 조합원 두 동지의 투쟁은 정말 눈물겨운 3개월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코웨이 코디·코닥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아웃 업무 해약은 우리 코디·코닥의 노고를 무시하고, 코웨이가 우리의 과거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연화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도 '원아웃 업무 해약'하는 코웨이 사측을 규탄했다.

"우리 코디·코닥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절대 아닙니다. 일할 때는 노동자로 부려 먹고, 버릴 때는 사업자라며 내팽개치듯이 밥줄을 끊는 이 부당한 계약과 부당한 해약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를 힘차게 따라 외쳤다.

"실적은 강요하고 생존권은 외면하냐! 부당한 업무 해약 규탄한다!" "필요할 땐 직원, 필요 없으면 개인사업자, 일방적 업무 해약 중단하라!"

"우리를
갈구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에 맞서
일어나야 합니다"

호응

이날 집회는 두 여성 노동자의 투쟁이 더 널리 알려지고, 호응도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줬다.두 여성 노동자들이 발언할 때 참가자들은 매우 집중해서 들었고, 큰 박수를 보냈다.

이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 사전 계약 2건을 도둑질당했을 때,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라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세상에 버려진 느낌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진 돈이 없어 노동해서 먹고사는데 왜 내가 노동자가 아닌 것입니까?"

이미경 씨가 코웨이 코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며 이에 맞서 싸우자고 발언하자 참가한 코디 노동자들은 큰 호응을 보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화려한 '국뽕'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계정 갑질, 영업 압박으로 아수라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절도, 폭행, 무단 침입이라는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지금도 어디선가 부당하게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웨이 코디들은 정규직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도 중단돼야 합니다. 코디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갈구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에 맞서 일어나야 합니다."

석효선 씨도 힘차게 발언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저는 억울하게 강제 해고당했습니다. 영업 실적을 가로채고, 그것을 덮기 위해 폭행이라는 거짓말을 지어내 내용 증명 우편 한 통으로 해고 조치됐습니다.

"코웨이는 13년을 일했는데도 존중은 없고, 삼자대면도 없고, 말 한마디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코디 동지들만이 저의 사연을 들어주고 믿어 줬습니다."

"전국 1만 2,000명 코디들이 각 지역에서 갑질과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급으로 1,000원도 받지 못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며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코웨이는 노동 착취, 임금 착취로 얻은 이익과 성과로 정수기 업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코디들이 없었다면 그 많은 성과와 이익은 이뤄 낼 수 없었습니다. 코디는 코웨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코디가 바로 코웨이입니다."

"전국 코디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싸워 이겨서 다시 업무에 복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디 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한 코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고, 싸워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두 코디 노동자의 힘찬 투쟁은 동료 코디 노동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 계정(일감) 갈취를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해야 했던 코디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대구 동부의 한 지국에서는 지국장의 부당한 계정 갑질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이 지국의 노조 분회장이 코디들을 적극 조직해 항의했다.

이 지국은 몇 달 전 코디 노동자 한 명이 범죄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일을 그만둬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최근 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지국 코디 노동자들의 분노가 크다.

이미경, 석효선 두 코디 노동자의 다부진 투쟁 소식이 이런 항의에 자신감을 줬다. 두 노동자는 이 지국 앞에서 홍보전(작은 집회)을 열고 자신들의 부당해고를 알리며 계정 갑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최근 이 지국 조합원이 2명에서 18명으로 부쩍 늘었다. 조합원은 더 늘어날 분위기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인접 다른 지국 코디 노동자들이 이미경, 석효선 두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지국 앞에서도 홍보전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생겼다.

석 달째 투쟁을 이어 오고 있는 이미경, 석효선 씨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응원으로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 갈 예정이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가해 자신들의 투쟁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부정의하고 부당한 해고에 맞서 용기 있게 싸우고 있는 코웨이 두 여성 노동자에게 힘껏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안우춘

▶ 12면에서 이어짐

파견 확대까지 추진 중

초광역특구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못지않게 위험한 내용이 파견 확대다.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파견법은 허용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묶여 있지만 정부는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고용 유연화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1998년 경제 위기 때 파견법이 제정됐다. 사용자는 임금과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필요할 때 노동자를 쓰고, 버릴 수 있게 됐다.

손쉽게 쓰고 버리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등은 파견이 금지돼 왔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등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벌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싸워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 단체들은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확대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도 노동 개악의 한 의제로 파견 확대를 추진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서 파견을 확대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주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특구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역차별 운운하며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라는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뿐 아니라 파견 확대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장시간 노동·비정규직 확대 멈춰라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 출처 민주노총

직무급제는 '동일임금' 탈을 쓴 임금 억제책

정부는 12월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무별 임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직무급제를 강화하려 한다. 동일임금을 주려면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를 위해 오랜 기간 제기돼 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여성·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또,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기간제와 파견제 등을 더욱 늘리려 한다. 한쪽으로는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다른 쪽으로는 동일임금을 말하는 정부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직무급제의 본질은 임금 억제다. 고령화로 임금 부담이 커지자 기업주들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허물고 싶어 한다.

이것은 여성이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직무급제가 도입된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지난 수십 년간 더 심화됐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된 직무급제는 평생 저임금을 고착시켰다.

저임금에 묶어 두기

노동조합의 교섭전문가층(지도층)은 상층 간부의 일부는 직무급제를 임금 차별의 대안으로 검토하며 정부와의 협상 대상으로 여겨 왔다.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정년연장 TF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가해 왔고, 지난해 이 TF에서 정년 연장의 대가로 "업종별 직무급제"를 노사 자율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 억제를 목적으로 한 직무급제를 노조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격차 해소의 진정한 동력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사용자들에 맞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때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

직무급제는 초광역특구법과 함께 저지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악이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란 전쟁과 한국의 참전 문제
인공지능(AI) - 희망, 거품 혹은 재앙?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or.kr/subs2





사진 출처 청와대

대화 주제로 노동 개악 종합세트 내민 이재명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악 좌절돼야 한다

본지 노동조합팀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한국의 수출액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1조 달러를 넘기는 것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러나 늘어나는 부만큼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올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4~7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8월에는 0.8퍼센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원을 우선하며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 규제 완화와 함께 영리병원 설립, 특권학교 설치 허용, 유해화학물질 명칭 은폐 허용 등 각종 친기업 개악 정책들이 포함될 것이다.

노동 개악도 추진한다. 상대적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 적용과 휴게, 휴일, 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제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대상 확대·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각종 노동 개악이 망라된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에 전국에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한다.

사실 초광역특구법 추진 이전에도 정부의 노동 개혁 후퇴와 개악 추진은 이어져 왔다.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를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과 같은 경영상 결정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노란봉투법에서 조금이나마 확대했던 파업권조차 후퇴시켰다.

역대급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업 지원과 국방비는 크게 늘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과 복지 증가는 매우 부족하다. 지방정부에게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겨우 2퍼센트 늘어 지방정부가 제공하던 복지는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교부금도 제도를 개악해 증가 폭을 크게 줄이려 한다.

대화와 투쟁 병행?

정부의 계속된 개악 추진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자세가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정부가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는 민주당이 노동 개악 법안을 발의하며 노동계의 뒤통수를 쳤다.

10월 2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반칙이 반복된다면 퇴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노동 개악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가한다면 노동 개악에 들러리 서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을 주요 업무로 하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와 주고받기 타협을 논의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노동 개악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정년 연장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타협이 지나치면 1998년 배석범 집행부의 노사정 합의 때처럼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시 배석범 집행부는 전교조 합법화를 받았다면서 정리해고제 법제화, 파견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 결과 전교조는 여전히 노동 3권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고용 불안정과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만약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공격하고, 추후 연금 개악 등을 더욱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경쟁력을 우선하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대화보다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커져 가는 불만을 투쟁으로 표현하려 노력해야 한다.

▶ 11면으로 이어짐